

중소·중견기업의 이행성보증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2014. 6. 26



작성 : 정창구 금융지원처 처장 cgjung@icak.or.kr
정종현 금융지원처 팀장 jonghyun@icak.or.kr
김지현 정책기획처 팀장 chocojh656@icak.or.kr

중소 · 중견기업의 이행성보증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2014. 6. 26.

목 차

《 요약 》

I. 연구배경 및 목적	1
II. 이행성보증 실태분석	3
1. 국내 금융기관 지원현황	3
2. 이행성보증관련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분석	7
III. 개선방안 및 제언	13
1. 사업성평가 확대를 위한 기금조성 필요	13
2. 금융기관의 보증한도 산정방식 개선 필요	15
3. 이행성보증 개선에 대한 체계적 분석 필요	17
참고문헌	19

《 요 약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침체됐던 글로벌 건설시장이 다시 성장국면으로 빠르게 접어든 현 시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필요조건인 이행정보증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원도급 수주 지원책보다는, 국내 대기업의 하도급 형태의 진출이라도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 위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지난해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에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규모 확대 및 수수료 인하’, ‘보증심사의 사업성 평가 위주 전환’,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여력 확대를 위한 자본금 확충’ 등의 지원책들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그 변화를 체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이행정보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해외건설의 리스크에 대해 지나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이행정보증 확대를 위한 예외조항이나 특혜조항을 만든다면 보증기관의 수익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보증기관의 위험관리나 수익성 측면을 모두 고려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평가를 활용하여 사업성이 우수한 프로젝트를 선별해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현행방식이 바람직하지만, 실제 해외건설협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성평가 의뢰건수는 예년과 비교해 별로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주 선진화 방안의 내용 중에 ‘수출입은행에서 이행정보증 신규 발급시 K-Sure의 담보요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의 취지는 ECA간 중복보증을 금지함으로써 보증여력을 더 확대시키려는 의도였으나, 실제로는 ECA기관 중 한곳에서만 100% 부담하게 됨으로써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보증서 발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종전에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일수록 이행정보증 발급시, 수출입은행과 K-sure가 각각 일정 비율씩 부담하여 보증을 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고자 정부 측과 공적금융기관 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다 신속하게 ‘예외조항 적용 확대 등’의 해결방안이 도출되어야 하겠다.

아무쯏록 해외건설관련 모든 지원기관들이 합심해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정부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이행정보증 발급을 위해 ‘해외건설진흥기금’의 조성 등에 보다 전향적으로 임할 때 실질적인 혜택이 모든 건설업체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기여할 것임은 명약관화(明若觀火) 할 것이다.

중소 · 중견기업의 이행성보증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I. 연구배경 및 목적

2000년대 중반까지 글로벌 골디락스¹⁾ 상황하에서 글로벌 건설시장 또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연평균 12.7%의 성장을 하며 호황기를 맞았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11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로 대표되는 두바이월드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등 글로벌 건설경기 또한 급속도로 침체하여 2009년에는 전년대비 -6.8%의 역성장을 시현했다.²⁾

그림1. 글로벌 건설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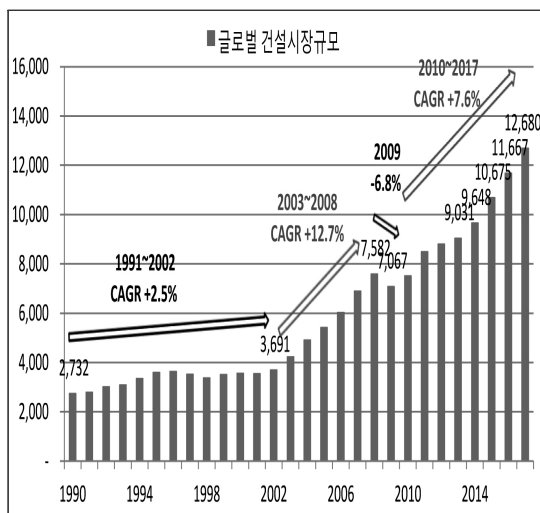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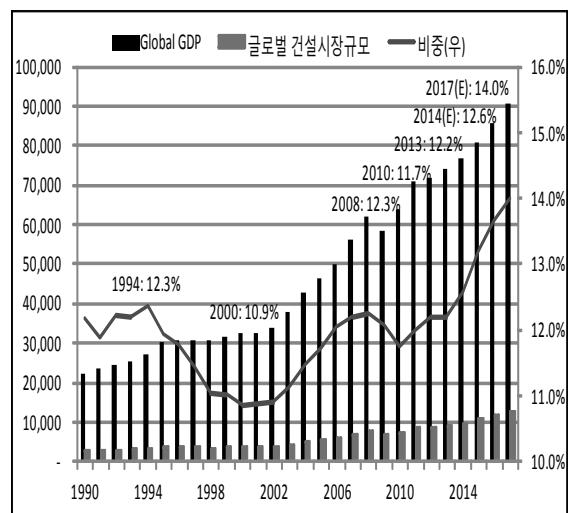


그림2. 글로벌 건설시장/GDP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자료: Global Insight(2014. 1분기 기준), 2014. 2분기 이후는 전망치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14.4)

- 1) Goldilocks :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도 물가상승 압력이 거의 없는 이상적인 경제상황
- 2) 국내건설기업의 해외건설수주는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2011년 하락했으나 이는 경기와 발주처의 발주간의 시간차(lag effect)에 기인한 것으로 글로벌 건설시장은 2009년을 침체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글로벌 금융완화 공조로 인해 경기는 저점을 빠르게 통과하여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였고, 글로벌 인사이트³⁾에 따르면 글로벌 건설시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연평균 7.6%의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GDP대비 글로벌 건설시장 비중도 올해에는 종전 최고치였던 12.3%를 넘을 것으로 보이며, 2017년에는 글로벌 GDP 대비 14.0%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기업의 해외건설수주는 2007년 이후 지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지난해 누적 수주 기준 6,000억 달러를 달성했고, 올해에는 700억 달러 이상의 수주를 기대하는 등 해외건설은 전반적으로 호황기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양적인 성장이 주요 대기업에만 집중될 뿐 중소·중견기업으로의 낙수효과는 미미한 듯하다. 물론 아래 <그림4>에서 보듯이 2006년 이전에 비해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임은 분명하지만, 주로 국내 대기업의 하청비중 위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수주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가 훨씬 큰 해외 원청공사에 곧바로 진출하는 것을 반드시 권장할 일은 아닌 듯 하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서히 내부역량을 배양한 후에 해외사업에 뛰어들어도 절대 늦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림3. 해외건설 수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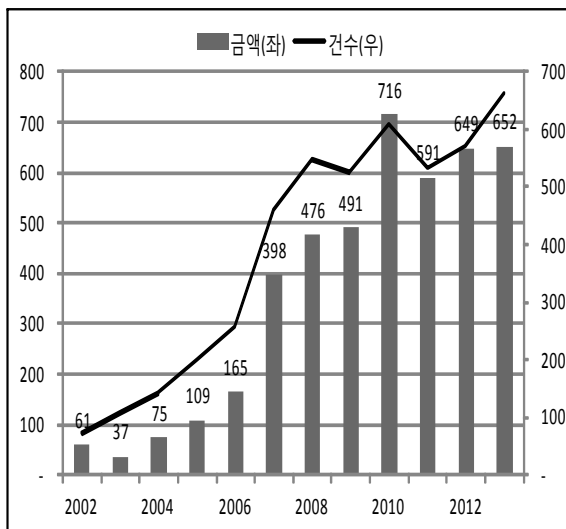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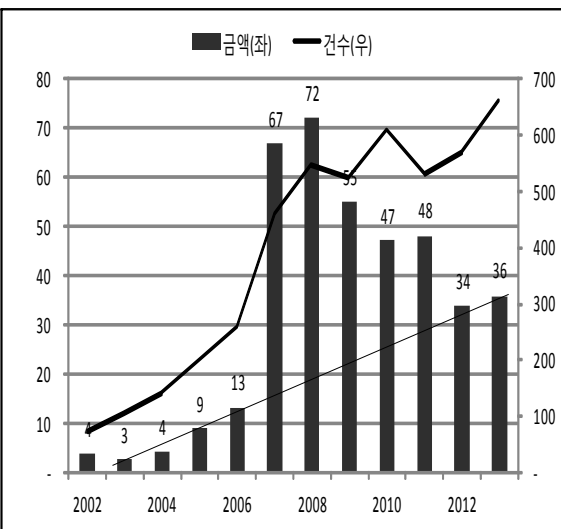


그림4.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수주현황

(단위 : 억 달러)



자료: 해외건설협회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 그동안 수없이 거론된 이행정보증 발급문제에 대해 현황을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원도급 수주를 위한 지원책보다 아래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대기업의

3)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 조사 및 연구 기관인 IHS에서 발표하는 업종별 조사 분석 데이터

하도급 형태로의 진출이라도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발급관련 실질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제언코자 한다.

표1. 중소기업 수주형태별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9
전체 해외수주(A)	49,148	71,579	59,144	64,881	65,207	31,863
중소기업(B)	5,510	4,712	4,818	3,397	3,591	1,258
비중(B)/(A)	11.2%	6.6%	8.1%	5.2%	5.5%	3.9%
- 해외도급	3,674	1,703	1,915	765	559	134
· 원도급	2,997	131	1,772	400	325	107
· 하도급	677	388	143	366	234	27
- 국내 원도급 ^{주)}	62	80	137	62	75	43
- 국내 하도급	1,773	2,929	2,766	2,570	2,955	1,085
국내 하도급 비중 (중소 전체 대비)	32.2%	62.2%	57.4%	75.7%	82.2%	86.2%
국내 하도급 비중 (해외 전체 대비)	3.6%	4.1%	4.7%	4.0%	4.5%	3.4%

주: KOICA 등 국내 발주처 공사

자료: 해외건설협회

우선 지난해 하반기 국내금융기관들로부터 조사한 2012년~2013년 6월말까지 이행성보증 지원실적 자료에 대해 분석을 통해 국내금융기관들의 이행성보증 지원에 대한 양적, 질적인 측면에 대해 정확한 실태분석을 해 보았다. 또한, 최근 실시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지난해 ‘8.28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 등 정부 지원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끝으로 해외건설 보증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등 정책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이행성 보증 실태분석

1. 국내금융기관 지원현황

1) 금융기관별 이행성 보증 발급 실적

지난해 하반기 국내금융기관들로부터 조사한 2012년~2013년 6월말 기준 이행성보증 실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금융기관들이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이행성보증 발

급 상황 및 그 이전 3년(2009년~2011년)에 비해 어떻게 개선 혹은 악화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아래 <표2>는 국내은행에서 발행한 이행정보증 실적이다.

표2. 금융기관별 해외건설 이행정보증 신규 발급내역 ('12.1~'13.6월말)

(단위 : 천 달러)

기관명	총 발급내역	기관명	총 발급내역
A은행	8,364,779	G은행	87,437
B은행	1,663,710	H은행	80,652
C은행	940,381	I은행	79,655
D은행	484,029	J은행	57,558
E은행	332,799	K은행	14,384
F은행	294,905	합계	12,400,290

상기 조사대상 기간(2012년~2013년 6월말)중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수주액이 아래 <표3>과 같이 총 957억 달러였으므로 필요 보증액은 총 수주액의 30%로 산정하여 약 287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기간 중 국내은행을 통한 보증 발급비중이 43% 수준(124/287)에 그쳐 그 이전 3년간(2009년~2011년) 국내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비중 약 55%(296/540)에 비해 오히려 12%p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3. 해외건설 수주액 대비 이행정보증 발급 비율

(단위: 억 달러)

대상기간	해외수주액	필요보증액	발급실적	발급비중
2009~2011 (3년간)	1,798	540	296	55%
2012~2013.6 (1.5년간)	957	287	124	43%

주: 필요보증액은 해외수주액의 30%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보증조건 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외국계은행이나 발주처 지정 로컬은행을 통해 발급받았을 것으로 예측되며, 주로 대기업들이 수주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금융기관의 보증한도 초과 혹은 그룹별 신용공여한도 (Total Exposure)문제 등으로 해외금융기관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결국 해외공사 수주로 인한 외화가득액의 상당부분을 해외금융기관에 헌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래 <표4>는 K-Sure,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국내 부보기관들이 발급한 이행정보증 부보실적이다. 이 중 국내금융기관을 경유한 실적은 전체 발행실적 약 66억 달러 중 40억 달러로 6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 3년간(2009년~2011년) 부보기관 보증실적 131억 달러 중 국내은행을 경유한 실적이 68억 달러로 52%를 차지한 것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부보기관별 이행성보증 신규 발급내역 ('12.1~'13.6월말)

(단위 : 천 달러, %)

기관명	총 발급실적(A)	국내은행 경유실적(B)	B/A(%)
S기관	5,311,644	3,431,289	64.6
T기관	898,166	215,488	23.9
U기관	180,696	180,696	100
V기관	180,105	180,105	100
합계	6,570,611	4,007,578	60.9

아래 <표5>는 국내은행과 부보기관에서 발급한 이행성 보증에 대해 각 종류별 발급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표5. 이행성 보증 종류별 발급액 현황('12.1~'13.6월말)

(단위: 천 달러)

은행	발급액	입찰보증	선수금보증	이행보증	R-Bond	W-Bond	기타
A은행	8,364,779	536,585	2,645,932	2,657,869	374,716	108,055	2,041,622
B은행	1,663,710	365,650	598,409	667,176	-	32,476	-
C은행	940,381	19,425	354,256	480,715	-	49,943	36,042
D은행	484,029	35,035	101,590	335,904	4,038	7,462	-
E은행	332,799	50,389	15,083	248,035	-	-	19,292
F은행	294,905	68,671	35,933	190,301	-	-	-
G은행	87,437	15,443	13,495	17,593	839	7,193	32,875
H은행	80,652	33,320	1,116	46,216	-	-	-
I은행	79,655	14,228	32,592	25,590	-	2,259	4,986
J은행	57,558	2,273	33,642	17,240	-	-	4,403
K은행	14,384	7,732	340	2,421	-	3,891	-
합계	12,400,290	1,148,751	3,832,388	4,689,060	379,593	211,279	2,139,220
비중(%)	100	9.3	30.9	37.8	3.1	1.7	17.2

부보기관	발급액	입찰보증	선수금보증	이행보증	R-Bond	W-Bond	기타
S기관	5,311,644	72,497	2,641,795	2,384,411	73,898	14,314	124,731
T기관	898,166	4,659	155,549	651,236	-	86,722	-
U기관	180,696	3,738	88,879	55,696	579	24,471	12,333
V기관	180,105	11,919	75,627	89,604	2,955	-	-
합계	6,570,611	92,813	2,961,850	3,180,947	77,432	125,507	137,064
비중(%)	100	1.4	45.0	48.4	1.2	1.9	2.1

주: R-Bond는 유보금보증, W-Bond는 하자이행보증

국내은행이나 부보기관 공히 이행보증(P-Bond)에 대한 보증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선수금환급보증(AP-Bond)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소 특이한 점은 입찰보증(B-Bond)의 경우 부보기관 이용비율이 현저히 낮았는데 이는 은행에서 직접 발급해주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사완료 후 주로 발급하는 하자이행보증이나 유보금환급보증의 경우에도 총 발급액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기업규모별 발급현황 및 조건

아래 <표6>은 기업규모별 발급액 및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은행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앞 보증발급 비중이 5.9%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부보기관의 지원비중인 15.0%에 비해 더 낮았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용도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부보기관을 통한 보증서 발급요구를 더 많이 받기 때문일 것이다.

표6. 기업규모별 발급액 및 비율

(단위: 천 달러)

은행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금액	비중 (%)	금액	비중(%)
A은행	8,050,399	96.2	314,380	3.8
B은행	1,614,709	97.1	49,001	2.9
C은행	791,756	84.2	148,625	15.8
D은행	439,302	90.8	44,727	9.2
E은행	311,880	93.7	20,919	6.3
F은행	208,496	70.7	86,409	29.3
G은행	87,437	100	0	0
H은행	78,420	97.2	2,232	2.8
I은행	73,728	92.6	5,927	7.4
J은행	459	0.8	57,099	99.2
K은행	12,512	87.0	1,872	13.0
합계	11,669,098	94.1	731,192	5.9

부보기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S기관	4,637,559	87.3	674,085	12.7
T기관	786,702	87.6	111,464	12.4
U기관	-		180,696	100.0
V기관	157,921	87.7	22,184	12.3
합계	5,582,182	85.0	988,429	15.0

한편 금융기관별 이행정보증에 대한 평균수수료율을 살펴보면, 은행에 비해 부보기관의 수수료율 가중평균값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담보요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신용으로 한도제공하는 비율이 높은 부보기관의 보증료율이 은행보다 더 낮게 나온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은행에 따라 이행정보증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다르게 평가하여 은행간 편차도 다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7. 금융기관별 평균 수수료율

은행	수수료율(%)	부보기관	수수료율(%)
A은행	0.451	S기관	0.206
B은행	0.421	T기관	0.696
C은행	0.854	U기관	1.641
D은행	0.727	V기관	1.018
E은행	0.447	가중평균	0.335
F은행	0.594		
G은행	0.767		
H은행	1.088		
I은행	0.446		
J은행	1.304		
K은행	0.526		
가중평균	0.502		

2. 이행정보증관련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분석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이번 설문조사는 2014년 4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회신내용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우선 설문조사는 총 251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총 64개사가 설문에 응하였는데,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46개사, 중견기업이 18개사였다. 업종별로는 토목 23개사(28%), 엔지니어링 18개사(22%), 건축과 플랜트가 각 15개사(19%), 전기 8개사(10%), 제조 2개사(2%)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⁴⁾

1) 이행정보증 발급기관 현황 및 애로사항

먼저 설문대상 기업들이 보증서 발급시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회사 중 38개사가 ‘국내 시중은행’을 선택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수출입은행’, ‘서울보증보험’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도급 수

4) 업종은 업역이 중복됨을 감안하여 복수응답한 업체의 경우 각 1개의 업체로 계산

주시 국내 원청사로부터 요구받은 보증발급기관의 유형을 알 수 있는 근거로 은행을 통한 Bank Guarantee를 요구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8. 중소·중견기업의 보증서 발급 금융기관 활용현황

기관명	빈도	비중(%)	다중응답백분율(%)
시중은행	38	27.1	64.4
수출입은행	26	18.6	44.1
서울보증보험	24	17.1	40.7
K-Sure	15	10.7	25.4
건설공제조합	10	7.1	16.9
산업은행	5	3.6	8.5
전문건설공제조합	4	2.9	6.8
설비건설공제조합	4	2.9	6.8
현지로컬은행	3	2.1	5.1
국내외국제은행	2	1.4	3.4
현지외국제은행	2	1.4	3.4
기타(신용 등)	7	5.0	11.9
합계	140	100.0	237.3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에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이행정보증과 관련된 설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5.3%가 해외시장 진출에 금융지원 개선을 필요로 하였으며, 시급한 금융지원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1개사(83.6%, 다중응답 백분율⁵⁾)가 ‘보증한도의 충분한 제공’을 선택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행정보증 발급 여부’ (47개사, 77.0%, 다중응답 백분율), ‘보증조건의 개선’ (43개사, 70.5%, 다중응답 백분율)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9. 금융지원 개선요구 사항

개선요구 사항	빈도	비중(%)	다중응답백분율(%)
보증한도의 충분한 제공	51	29.5	83.6
이행정보증 발급의 여부 ⁶⁾	47	27.2	77.0
보증조건의 개선 ⁷⁾	43	24.9	70.5
금융권의 신용평가 위주 심사	29	16.8	47.5
기타	3	1.7	4.9
합계	173	100.0	283.6

※ 복수응답 회사를 개별회사로 감안하여 응답회사수는 173개임

5) 다중응답 백분율: 전체응답자 중 각 항목을 선택한 수의 비율을 의미하며, 1명의 응답자가 1개 이상의 답을 선택하기 때문에 다중응답 백분율의 합은 100%보다 큼

6) 보증서 조건과 무관하게 보증서 발급 성사 여부를 의미

7) 보증수수료 인하, ‘금융권의 신용평가 위주 심사’는 개별기업의 신용평가 외 사업성평가 등 평가 방식의 보완을 의미

그리고 직보증이 아닌 복보증이나 복복보증을 활용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현지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 반영’, ‘은행의 단독 발급 기피’, ‘부보기관의 추가 담보 요구’ 등이 고르게 나타났다. 결국 기업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직보증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주처와 금융기관 모두에게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낮은 중소·중견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하거나 부보기관의 보증서를 통해 신용보강을 하는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상대적으로 금융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자칫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10. 복보증·복복보증 활용사유

활용사유	중견	중소	빈도	비중(%)
부보기관의 추가 담보 요구	10	15	25	22.7
현지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 반영	12	17	29	26.4
은행의 단독 발급 기피	7	20	27	24.5
국내 보증기관의 보증 기피	1	12	13	11.8
국내 원청사의 은행보증서 요구	2	9	11	10.0
기타	4	1	5	4.5
합계	17	32	110	100.0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시 가장 많이 요구받는 담보’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국내 시중은행은 ‘예금담보’, 국책은행은 ‘보험기관 보증서(부보)’, 부보기관은 ‘신용’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표11. 금융기관별 요구 담보

구 분	보증	부동산	예금담보	부보	신용	합계
시중은행	19.2%	7.7%	32.7%	23.1%	17.3%	100.0%
국책은행	13.5%	0.0%	21.6%	45.9%	18.9%	100.0%
부보기관	27.8%	2.8%	11.1%	16.7%	33.3%	100.0%

그 밖에 향후 회사의 신용도 개선 및 실적 향상 등의 사유로 부보기관을 고를 수 있게 될 경우 희망하는 이행정보증 발급기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1순위는 ‘수출입은행’ (53.6%), 2순위는 ‘주거래은행(K-Sure, 건공 등 부보율 감소조건)’ (32.1%)으로 두 금융기관 누적치는 85.7%이다.

아래 표12에서 보듯이 다음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사유에 대해 설문(복수응답)해 보았다. 전체 응답 40개사 중 32개사가 ‘보증한도 부족’을

선택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추가 담보요구에 대해 대응부족’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은 ‘추가 담보요구에 대해 대응부족’을, 중소기업은 ‘보증한도 부족’으로 나타나 기업의 현지진출 경험 및 사업성 부족보다 오히려 보증한도나 담보가 더 중요한 거절사유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이행정보증 발급이 거절되어 계약포기 등 불이익을 경험한 회사가 전체 응답사의 53.1%에 달했는데, 주로 이행보증(P-Bond) 발급단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표12. 기업 규모별 보증발급 거절 사유

구 분	보증한도 부족	워크아웃 등 신용부족	현지진출 경험부족	사업성 부족	추가담보 대응부족	기타
중견기업(수)	7	5	1	1	9	2
중소기업(수)	25	4	8	8	18	6
합계	32	9	9	9	27	8

그밖에 ‘이행정보증 발급을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시점’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입찰공고 개시시점’이 13.6%, ‘F/S 완료 후’가 6.8%, ‘PQ 통과되어 계약체결 임박시점’이 50.8%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71.2%가 ‘PQ 통과되어 계약체결 임박시점’까지 이행정보증 발급을 금융기관에 문의하지만, ‘계약체결 후’ 문의도 28.8%의 비중을 보였다.

또한, 동일한 담보 제공을 가정으로 1,000만 달러를 수은과 시중은행에 각각 5백만 달러씩 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간 수수료율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16개의 회사(51.6%)가 0.5% 이하로 답변했으나, 12개의 회사(38.7%)는 0.5~1%라고 답변했으며, 3개의 회사(9.7%)는 1%를 초과한다고 응답했다. 해외건설 사업의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수료의 차이가 1%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것이다.

2) 유보금 환급보증 현황

다음은 최근 기업들이 수주한 해외사업 수행과정 중에 겪는 애로사항 중 기성금 유보문제와 관련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우선 ‘기성금 유보여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51.9%가 있다고 응답하여, 과반수가 기성금이 유보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금이 유보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 평균 19.9개월 동안, 총 공사비의 6.2%가 유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보금이 경영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매우 심각한 편이다’와 ‘심각한 편이다’를 선택한 회사가 20개사로 응답회사의 50%가 유보금으로 인해 경영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 공히 유보금이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30개사 중 3개사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하여 유보금 환급관련 대출이 있을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보된 공사비를 최종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 사유로는 발주처 고의 지연 등 다양한 미회수 원인이 존재하였다.

표13. 유보금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미회수 사유

경영에 미치는 영향	빈도	비율(%)	미회수 사유	빈도	비율(%)
미미한 수준	6	15.0	원청사의 유보금 미회수	4	23.5
감수할 수준	14	35.0	공사하자로 유보금 소진	1	5.9
심각한 수준	17	42.5	계약조건불이행 지체상금	4	23.5
매우심각한 수준	3	7.5	기타	8	47.1
합계	40	100.0	합계	17	100.0

또한, ‘원청사가 발주처로부터 유보금을 받지 못해 back to back 형태로 피해를 받는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인 15개사는 ‘법적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회사는 1개사에 그쳐, 대부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공사비의 5~10% 수준인 유보금 환급을 제 때 받지 못하거나, 아예 못 받게 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도급사업의 수익성이 한자리수인 점을 감안할 때 어렵게 공사를 수행하고도 자칫 수익이 모두 물거품이 되거나, 오히려 역마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 통상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원청사와 하청사의 관계에 있어 유보금 회수를 위해 원청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하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유보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수 있기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밖에 ‘하자이행보증서로 유보금 환급 여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33.3%가 있다고 응답하고, 66.7%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기업형태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중견기업은 유보금 환급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보금환급보증을 발급받더라도 응답자 중 7개사는 ‘회사의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발급은 받을 수 있었으나, 추가 수수료 등 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유보금 담보 대출을 취급한다면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을 묻는 설문에는,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만약 정부 주도로 ‘유보금 대출’을 취급할 경우 총 대출이자율은 ‘5% 이하’ 정도까지는 감내 가능하다는

응답이 84.2%를 차지하였다. 또한, 유보금관련 대출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의 경우 낮은 대출금리에도 불구하고 “제작금융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답변과 “심사절차가 복잡하고 소요기간이 길다.”는 답변이 각각 23.4%로 제작금융 관련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기타 건의사항

끝으로 해외건설보증 관련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 ▶ 이행정보증서 발급 시 사업성평가를 활용함에 있어 각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및 시공현황 및 해외 개발 중인 사업 적정성 등의 평가를 통해 보증 및 금융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 필요
- ▶ 발주처의 현지 로컬 은행의 보증서를 요구하는 경우 비싼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복보증을 피할 방법이 없음. 따라서 국내 기업이 해외 발주처(국가 간 개발 협약 및 국내 업체의 주요 진출국)에 국책은행을 통한 직발급을 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의 다양한 현지지사 진출 및 국가 협력이 필요함
- ▶ 이행보증의 경우 공사 진도율에 관계없이 이행보증 잔존액을 100% 산정하므로 누계보증액이 커지는데, 선급금보증이 선급금 환수율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일종의 ‘이행률’을 적용해서 보증잔여액을 산정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 사업성 평가를 통한 기업의 보증에 대하여 정책적인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제도에 대한 홍보가 더욱 요구됨
-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이 부족하여 해외 이행정보증보험 요구 시 대표이사의 자산을 담보로 하던가, 아니면 현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공사수주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해외건설협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평가 후 프로젝트를 담보로 한 이행보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요망
- ▶ 보증 업무가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한 국책은행의 보증 한도 증액 및 업무 조직 및 인력 확대를 통해, 보증 업무 처리 지연을 해소해주길 바랍

Ⅲ. 개선방안 및 제언

1. 사업성평가 확대를 위한 기금조성 필요

금융기관에서 특정 차주에 대한 보증한도 등을 산정할 때 기업의 재무제표만을 근거로 신용한도 등을 산정하고 있는 기존의 평가방식에서 탈피하여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이 우수할 경우 그 결과를 신용평가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방법으로 제안하였으나, 이번 설문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전히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물론 사업성평가를 활용해 봤던 회사들은 금융기관의 보증 심사시 ‘보증한도 확대’, ‘담보제공 비율 축소’, ‘심사(승인)기간 축소’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53.2%가 활용한 적이 있거나, 향후 활용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45.4%는 사업성평가 업무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점으로 볼 때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중견기업은 66.7%가 사업성평가 업무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54.7%가 사업성평가 업무 자체를 모르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성평가의 실질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사업성평가 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사유로 금융기관이 평가결과를 차주의 신용평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사업성평가 의뢰 시점이 너무 임박하여 사업성평가를 의뢰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평가수수료 부분은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업성평가 업무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에게 홍보하였으나, 여전히 활용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신용평가나 여신한도 산정시 사업성 평가결과 반영 여부에 대해 소극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4. 사업성평가 인지도부 및 미활용 사유

인지여부	빈도	비율(%)	미활용 사유	빈도	비율(%)
알고 활용	6	10.0	높은 평가수수료	3	6.7
알지만 미활용	25	41.7	금융기관의 미반영	16	35.6
모르지만 향후활용	28	46.7	의뢰시점이 임박	14	31.1
모르며 활용의사없음	1	1.6	기타	12	26.7
합계	60	100.0	합계	45	100.0

이처럼 사업성평가를 통한 사전적 리스크관리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정 프로젝트의 시공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금융기관 앞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도 지원 프로젝트가 완공될 때까지의 생애 주기 전체에 대한 리스

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현재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수출입은행 뿐 아니라 K-sure, 건설공제조합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활용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하여 이행성 보증에 대한 직접적인 리스크를 부담하는 금융기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협회 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사업성평가 활용을 근본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거 운용했던 ‘해외건설진흥기금⁸⁾’과 같은 정책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사업성평가를 통해 지원한 프로젝트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Bond Calling에 대한 일정액(비율)을 이 기금에서 보전해 준다면 금융기관들의 이용률이 훨씬 증가할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금융기관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하였지만 기존의 신용평가 Tool을 변경하여 새롭게 사업성평가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선 평가보고서 자체의 신뢰도 부분보다 추가지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아무런 보장 내지는 지원책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일거에 중소중견기업의 이행성보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해외건설진흥기금 혹은 유사한 기금의 부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1%가 해외건설진흥기금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해외건설진흥기금에 출연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81.0%가 출연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15. 해외건설진흥기금 출연 의사

출연의사	중견	중소	합계
있다	2	7	9
의사는 있으나, 고려	11	27	38
없다	3	8	11
합계	16	42	58

만약 기금의 조성이 여의치 않다면 기존에 정부부처 혹은 정책금융기관들에서 조성했거나 조성 중인 해외건설 지원관련 각종 펀드 등에서 일부 금액(비율)을 출연받아 중소·중견 건설기업 이행성 보증 지원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 하며, 물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민간업체의 출연금과의 매칭방식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이 현실화 된다면 이행성보증 지원 금융기관

8) 해외건설진흥기금 : ‘80년에 조성되어 ’99년 폐지됨

▶ 목 적 : 해외건설의 지속적 안정 및 성장에 필요한 금융지원

▶ 용 도 : ① 해외건설 지속성장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②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③ 해외건설 글로벌화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들의 부담을 경감(risk mitigation)시켜 보다 적극적인 상품개발 등을 통해 이행성 보증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이다.

2. 금융기관의 보증한도 산정방식 개선 필요

1) 수주의 質에 따른 신용평가기준 차등적용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개별기업의 신용도 평가시 내부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주로 차주의 재무제표가 가장 기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차주별 과거 공사수행 실적이라든지 발주처의 신용도 등에 대한 입수 가능한 자료 등은 보증한도나 수수료를 산정에 있어 그다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해외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투입자본의 회수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워낙 다양한 외부변수 등이 있기에 발주처가 우량한 곳인지 발주재원이 확실한 지 등에 따라 다양한 리스크 변수를 신용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World Bank 재원으로 발주된 사업을 우리업체들이 수주했을 경우 차주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 공사수행능력 등에 대한 검증만 이뤄진다면 이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증한도 지원에 대해선 보다 전향적인 잣대로 한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내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금융기관들도 이행성보증 발급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먼저 요청할 경우 사업성평가 결과를 이행성보증 발급심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명문화(내규 반영 등)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그래서 특정 기준(일정 점수 이상, 회사신용등급 등)에 부합할 경우 한도 확대,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겠고,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맞춤형 특화 금융(보증)상품’ 개발을 한다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상의 지원 시스템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해 건설사들의 어닝쇼크 이후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수익성 우선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선별적인 수주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결과물로 최근 대규모 수주사업에 대해 우리기업들 간 혹은 외국기업들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수주에 성공하는 사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업을 통한 동반진출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동반진출에 대해 이미 수은, K-Sure 등 공적금융기관 중심으로 일부 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화된 지원정책들이 보다 확산되어야 하겠다.

2) ECA간 중복보증 금지관련 예외조항 확대적용 필요

그동안 많은 수많은 보고서와 세미나 등을 통해 거론되었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이행성 보증 발급문제임을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보증문제에 있어 일반적인 인식을 뛰어넘어 현업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중소·중견기업 앞 보증서 발급 거절의 주된 사유가 현지진출 경험이나 사업성 부족이 아닌 개별 차주의 보증한도 부족이나 금융기관의 추가 담보요청에 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문결과는 국내 금융기관이 이행성보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지나친 위험인식으로 과도하게 보수적인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물론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무조건적인 예외조항이나 특혜조항을 만든다면 보증기관의 수익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보증기관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나 수익성(profitability)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성평가를 활용하여 철저한 사업성분석 및 리스크관리를 통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은 과감히 포기시키고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 경우 사업수행 경험이 적은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 오판할 수 있는 부분을 보증기관이 걸러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의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해 8월 28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의 보증규모 확대 및 수수료 인하와 보증심사를 사업성 평가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여력 확대를 위해 자본금 등을 확충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아직은 기업들이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실제 해외건설협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성평가 의뢰건 수도 예년과 비교해 별로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해외건설업의 리스크 부분에 대해 정책금융기관들 스스로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해외건설에 리스크가 없다면 보증 또한 필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피보증인(건설사)의 신용도가 우수하다면 보증이 어려울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증의 목적이 피보증인의 낮은 신용도 보장 및 사업 리스크 분산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증을 거절하고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거나 수수료율을 높이는 것은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건설업계의 상황과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수주선진화 방안 내용 중 수출입은행에서 이행성보증 신규 발급시 K-Sure의 담보요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ECA간 중복보증을 금지함으로써 보증여력을 더 확대시킨다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

전기업들에게 도리어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신용도 낮은 기업 앞 이행정보증 발급시 수출입은행과 K-Sure가 각각 50%씩 지급보증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하여 발급했던 부분을 한 기관이 100%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 보증서 발급이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고자 정부 측과 공적금융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보다 신속하 ‘예외조항 적용 확대 등’의 해결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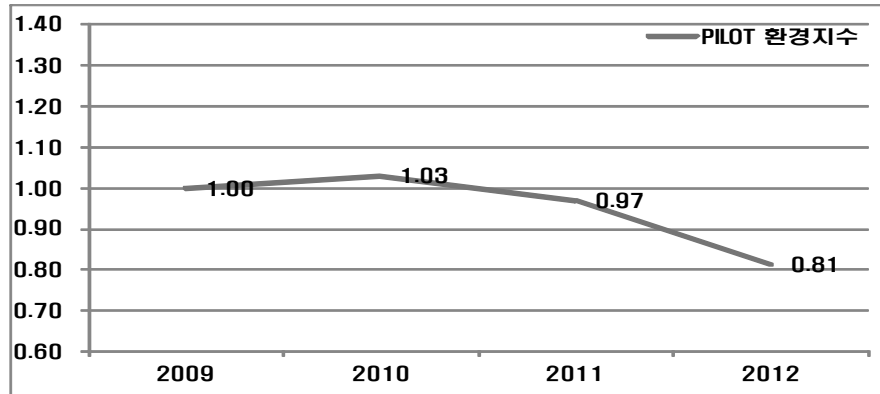
3. 이행정보증 개선에 대한 체계적 분석 필요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실태분석뿐 아니라 이행정보증 발급과 관련하여 보다 통계적인 접근을 해보려고 지수개발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다. 일선 금융기관에서 해외건설기업의 이행정보증 발급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를 지수형태로 확인해 보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도움으로 입수한 지난 몇 년간의 금융기관 지원실적을 근거로 ‘이행정보증 환경지수’를 개발한 바 있다.

이 지수는 아직은 PILOT수준이지만, 은행의 보증서 발급실적(50%), 부보기관의 보증실적(40%), 보증수수료율(10%) 등 3가지 변수로 구성했으며, 향후 보증발급 성사률, 담보별 구성내역, 사업성평가 반영여부 등의 변수를 추가하고 현재 기업형태 구분 없이 작성한 지수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으로 구분해 작성하는 등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만, 변수, 가중치 등의 구체화 및 금융기관의 자료협조 등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선결과제들이 있다. 아래 이행정보증 환경지수 그래프에서는 2010년 이후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해외건설기업의 이행정보증 발급 개선을 위한 정부나 해외건설협회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행성 보증시장에 대한 정확한 리스크 분석과 지원정책의 획기적 개선이 없다면 당분간 본 지수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지수가 대·중소기업의 구분없이 전체 이행정보증 실적을 근거한 지수이기에 다소 본 보고서 주제인 중소·중견기업에 초점을 맞춰 분석할 수는 없었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금동원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주로 보증한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보증이 거절되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여전하기에 본 지수가 제시하는 의미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본 지수가 향후 보다 실효성있는 지수로 발전하기 위한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특히 금융기관의 이행성 보증 지원 실적에 대한 정보와 함께 기업들의 경우에도 수주보고서 발주처 앞 제출한 이행성 보증관련 금융기관 활용현황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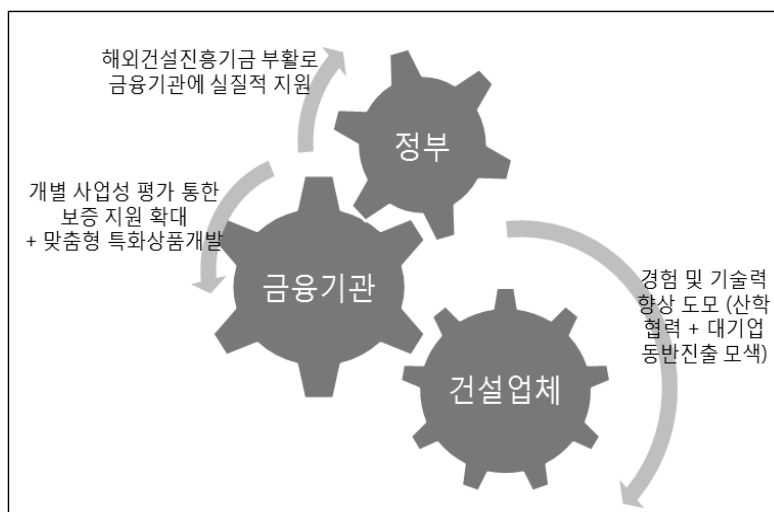
그림5. 이행성보증 환경지수



자료: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건설은 더 이상 개별기업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쟁시장 구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각 주체별 역할분담을 통한 선순환 지원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 요즘 많이 회자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더 이상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세계 초일류 IT기업인 삼성전자 뒤에 세계 초일류 IT부품업체가 있듯이 초일류 글로벌 건설기업의 탄생을 위해서는 초일류 중소건설업체 및 엔지니어링업체의 뒷받침이 필수적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쪼록 실력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있어 더 이상 보증문제로 불이익 받는 일은 없도록 아래 그림과 같이 정부는 정부대로 보다 전향적인 지원책을,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대로 보다 적극적인 심사기준 적용을, 기업은 기업대로 더욱 철저한 공사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글로벌 건설시장을 수많은 한국기업들이 주도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림6. 각 주체별 역할 분담을 통한 선순환 추구



[참고문헌]

건설공제조합(2011), 건설보증론(건설보증의 이론과 실제)

국토교통부(2013), 해외건설공사 사업성 평가·분석 강화 방안 연구

건설산업연구원, 해외건설공사보증 취급방안에 관한 연구

해외건설협회(2013), 중견·중소기업의 해외보증서 발급 실태 분석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2014), 이행성보증 환경지수

Global Insight(1Q 2014)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1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